광주시 예산 '4조원 시대' 열렸다

내년 예산안 4조 602억 편성 시의회 제출 청년일자리·마을공동체 사업 등 집중 투자

4조원을 돌파했다.

광주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4 조602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45억(0.8%)이 증 가한 3조1278억원, 특별회계는 1871억원 (24.8%)이 늘어난 9324억원이다. 전체적 으로는 올해 3조8485억원보다 5.5%인 2117억원이 늘었다.

세입은 지방세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 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올해에 비해 838억 원(7.1%)이 늘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 으로 예상됐다.

>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 해 894억원을 발행했던 지방채는 내년에 는 계획이 없어 채무비율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불요 불급한 경비 등 예산 낭비 사업을 제거,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 구현'을 위한 역 점 시책에 중점 배분하는 세출 예산 편성 의 기조를 마련했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 출을 위해 광주청년창업센터 등 12개 신규 사업 등 모두 22개 사업에 올해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151억원을 편성했다.

윤장현 시장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10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꽃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사계 절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푸른 도시 조성 사업에도 74억원이 쓰일 예정이 다. 주요 사업은 영산강·황룡강길(44km)에 이르는 아름다운 백년 숲길 조성사업(20 억원), 골목길 입체 벽면 녹화 사업(20억 원), 사계절 꽃 피는 광장 조성사업(8억원) 등이다.

민선 6기 6대 시정 목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참여하는 자치도시 사업에 올해 보다 890억원이 증가한 1조323억원이 반 영됐다. 각종 안전사업 등에 1조1625억원 이, 평등한 인권도시 사업에는 119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사업 예산 은 1조4230억원을 편성, 올해 1조3573억 원보다 4.8%인 657억원이 늘었다. 경제도 시 건설을 위한 분야에는 2377억원이, 문 화도시 관련 사업에는 1928억원이 반영됐

올해 집중 투자한 이노비즈센터와 지식 산업센터 건립 등이 준공을 앞두면서 경제 분야는 76억원이, 하계U대회 마무리에 따 라 문화체육 관련 사업도 619억원이 각각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 자립도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가장 높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대한 선 택과 집중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였 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 정가

"광주보건환경연 장비 노후 교체 시급"

"광주문화재단 '문화 메세나' 실적 미미"

문태환 광주시의원 주장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한 실 험·검사장비가 노후해 검사결과의 정 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소속 문태 환(광산 2) 시의원이 11일 광주보건환 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 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보건환경연구 원이 보유한 실험·검사장비는 모두 333대로, 이중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장비는 전체의 20%인 68대다.

특히 탁도계·소음 및 진동정밀분석 시스템·주사광학·레이저주사현미경 은 구입한 지 19년이 지난 것으로, 교 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9511만원 ▲지 난해 9505만원 ▲올 들어 이날 현재 6877만 원 등이다.

문태환 시의원은 "시 최고의 실험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20여 년 전 장비를 이용해 각종 실험·검사 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 름"이라며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산 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이용승객 3명중 1명 '꽁짜 손님'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 3 명 중 1명은 무임승차, 이른바 '공 짜 손님'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시의 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 지 최근 3년간 무임승차 비율은 평균 32.5%였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이용승객 1 천805만2천명 중 589만3천명이 무임승차 승객으로 집계됐다. 무임승객분을 요금으로 환산하 면 70억7천여만원으로 전체 수 입액 108억8천만원의 70%에 달

무임승차 비율도 2009년 30. 6%, 2011년 31.9%에서 꾸준히 늘 고 있다.

무임 비율이 높은 것은 65세 이 상 노인인구 비율이 광역시 중 가 장 높은 데다 5·18 민주화운동 유 공자 등 국가유공자도 상대적으 로 많기 때문이다.

지하철이 '서민들의 대표적인 발'인 점을 고려하면 무임수송비 국가 보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수송원가는 4천688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603 원에 불과해 요금 적정화율은 12. 9%에 불과했다.

/이종행기자golee@



사단급 부대 정찰용 무인항공기

방위사업청은 1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서 사단급 부대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초도 생산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무인항공기는 내년부터 최전방 육군과 해병대 사단급 부대에 배치된다. 〈방사청 제공〉

광주문화재단이 야심차게 추진중 인 '문화 메세나'(Mecenat) 프로젝트 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택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임택 (동구 1) 시의원은 11일 광주문화재단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환경 개선을 위한 명분으로 추진중인 문화 메세나의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고 지 적했다.

메세나는 기업이 사회공헌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문화예술에 지 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취 임한 서영진 대표는 오는 2023년까지 문화메세나 등을 통해 기금 500억원 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 달

성을 위해 문화보둠 1만 운동을 전개하 기로 했다.

> 하지만 의욕과는 달리 기부금 등 적립 금은 6억4천만원으

로 그나마 광주시 출연금 5억원, 국세환 급금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빈손이다. 문화 메세나를 통해 모금한 돈은 회원 162명이 적립한 174만원이 고작이다.

임 의원은 "지자체 출연금 만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메세나 취지에 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서영진 대 표는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 임직 원들의 참여 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지하철 1회용카드 43만개 회수 못했다"

김민종 광주시의원 밝혀

광주시 지하철 일회용카드 미회수가 43 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김민종(광 산 4) 시의원이 11일 광주시도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 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구입한 일 회용 승차권은 모두 51만장으로 이중 43 만장이 미회수됐다.

금액으론 약 6억원 상당이다. 현재 남은 일회용 승차권은 7만8854장이다. 한해 평 균 3만3076장의 동전 모양 일회용 승차권



이 생활쓰레기로 버려지 거나 서랍 속에 방치되 면서 장당 1400원씩(최 준), 5000만원 가량의 비 용이 매해 낭비되고 있

는 셈이다. 일회용 승차권 51만장 중 보통 권은 19만5000장을 구입했으나 회수량은 2만3000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 인권과 우대권은 각각 4만장과 27만5000 장을 사들였으나 회수량은 각각 1만3199 장·4만2568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광주의 경우 보증금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이용

객들이 깜빡 잊고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회용 승차권은 발 매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일부 이 용자들이 지속 사용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반납하지 않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서울의 경우, 일회용 승차권 발매 당시 보 증금이 포함돼 있어 하차 후 승차권을 반 납하면 돈을 환불해 주는 방식이어서 회 수율이 높다. 김민종 시의원은 "일회용 승 차권 미회수율을 줄이기 위해선 서울처럼 보증금 제도를 도입, 이용객들이 하차 후 일회용 승차권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 려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정치 정강정책에 자치·분권 명시해야"

민형배 광산구청장 제안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새정치민주연 합 정강정책에 '자치·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9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크쇼 '지방이 바뀌 어야 나라가 바뀐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민 구청장은 이날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정의당 모두 정강이나 전문에 는 자치와 분권에 관한 의견이 들어있지 않다"며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3개 부문 정책 중 '분권과 균형발전'을 독립 적인 정책으로 다뤄 다른 당과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민 구청장은 자치 와 분권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당 정강정 책 수정 기준을 제시 하면서 "당 전문에 '자치·분권'을 넣고,

균형발전 및 권한 나누기를 중앙의 기획 이 아닌 지역의 당연한 권리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이어 "개 헌, 준연방제, 소외지역 우대정책과 같 은 제도적 목표를 분명히 명시해야 하 고, 당이 이뤄야 할 사회구성의 원리로 서 자치,분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최승렬기자 srchoi@



